

홈플러스 사태 해결 및 국회 청문회 개최 결의안

(민병덕 · 신장식 · 정혜경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692
----------	-------

발의연월일 : 2025. 6. 10.

발 의 자 : 민병덕 · 신장식 · 정혜경
이정문 · 김현정 · 이수진
김병기 · 안도걸 · 김준형
박희승 · 이용우 · 이강일
복기왕 · 윤종오 · 전종덕
양부남 · 이광희 · 문진석
이해식 · 용혜인 · 한창민
이학영 · 박민규 · 전진숙
정태호 의원(25인)

주 문

국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련자에 대한 법적 · 정책적 조치를 촉구한다.
2.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된 진실 규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제안이유

2025년 3월 4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협력업체,

소비자, 노동자, 국민연금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본 사태는 2015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당시부터 예견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당시 총 인수금액 7조 2천억 원 중 자본금은 약 2조 2천억 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약 5조 원을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여 조달함으로써 대규모 부채를 홈플러스에 전가하였음. 그 결과, 홈플러스의 부채비율은 2014년 152%에서 2024년 1,408%까지 급등함.

또한, MBK파트너스는 인수 당시 1조 원 투자 및 정상 경영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음. 오히려 이후 부동산 매각을 통한 자본 회수에 집중하였고, 지속적인 자산 매각과 점포 축소로 인해 기업경쟁력은 심각하게 약화되었음.

기업회생절차 신청 직전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 사실(A3 → A3-)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채 단기 채권을 발행한 정황이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확인되었으며, 현재 검찰이 사기 혐의로 수사 중임. 기업회생절차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납품업체의 공급 중단, 상품권 사용 제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직영직원, 협력업체 직원, 배송기사 등 약 10만 명의 관련 노동자들의 고용과 입점주들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

음.

더욱이,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 펀드에 투자한 약 1조 원 규모의 자금도 손실 위험에 처해 있어, 사모펀드의 무책임한 경영에 대한 제도적 통제와 공적 자산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러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하였고, 현재까지도 사태 해결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이에 국회는 소비자 권익 보호, 노동자 생존권 보장, 국민연금 등 공적 자산의 손실 방지, 사모펀드 규제 개선을 위하여 청문회 개최를 결의하고자 함.